



‘우리농업 지키는 힘’ 무엇인가?

■ 정영일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 근 매일같이 매스컴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농업관련 이슈는 쌀과 마늘 문제이다.

작년 가을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대비해 5%이상 떨어지는 ‘쌀대란’을 맞으면서 우리 농업의 기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안감이 농촌을 뒤덮고 있지만, 약 400만섬 규모의 묵은 쌀을 대북지원 또는 사료로 처분한다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쌀 문제의 핵심은 일시적인 과잉재고가 아니라 구조적 수급불균형 때문에 현재의 추세 아래서는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2년 전 있었던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당면한 현안타결에만 집착한 나머지 2003년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적용을

중단하겠다는 합의내용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최근 농협이 무역위원회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을 신청하면서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협상과정이나 타결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농정당국의 대응을 보면 내년부터 5년간 1조 8천억원 규모의 마늘대책비를 책정하고 그 대부분을 마늘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및 해외 처분에 투입한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과연 마늘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농업경쟁력=품질경쟁력’ 소비자신뢰가 관건

오늘날 세계농업은 전후의 급속한 생산기술발전과 각국의 증산정책에 힘입어 거의 모든 품목에 걸친 구조적 과잉과 가격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농정의 조류는 증산



을 자극하는 가격지지정책 대신 소득보상적 직접지불제도와 경영안정대책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각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약속한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국내보조의 감축 및 수출보조의 삭감 등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농정의 자유재량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의 범위에도 적지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와 같은 농산물가격지지 정책을 통해 국내 부족분 이외의 수입을 규제하고 한계생산자의 생산비를 보상해주는 수매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와같은 개방시대의 여건아래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400만 농민의 생업인 우

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민 사이의 신뢰에 바탕을 둔 활발한 도·농 교류와 협력에서 찾을 수 밖에 없으며 신뢰관계의 확립을 위해 말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부의 정책이 우리 농업을 지키는 만병통치약인양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지원·감독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올바른 해결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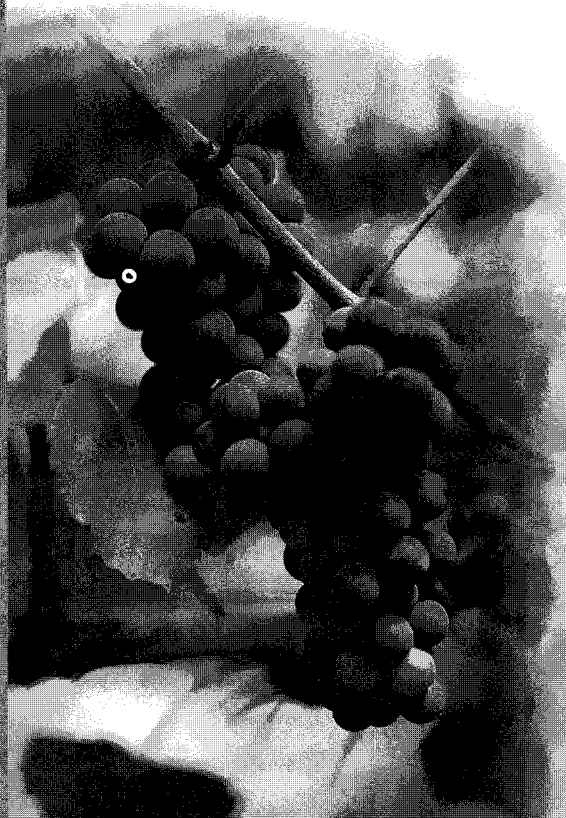
된다. 농산물도 하나의 상품인 이상 시장에서 수요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자명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쌀과 마늘의 예만 보더라도 수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수입품과의 경쟁아래서 국내생산이 수요를 계속해서 웃도는 경우 사후적인 과잉처리대책을 항구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기서 과도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수요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경쟁력의 원천은 가격과 품질 두 요소를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향상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비중을 두고 추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 즉 '얼굴 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통해 소비자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된다.

농정, 소비자선택 위한 지원 · 감독영역 벗어나기 어려워 '농업 힘' 정부 아닌 생산 · 소비자간 신뢰구축 통한 민간 몫



'식품안전성 · 식품표시제 · 자연순환농법체계' 확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음 몇 가지 과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다. 국제무역을 확대에 따라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광우병(BSE), O-157 등 병원성세균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환경호르몬, 유전자조작식품 등 식품안전성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해 예방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체계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작년이래 구제역발생으로 적지않은 손실을 입었지만 아직도 과학적인 원인구명을 통한 예방대책의 확립은 미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엔(UN) 산하의 국제식품규격 제정을 담

당하는 기구인 코덱스(CODEX)위원회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시스템으로 위험분석(risk analysis)기법의 채용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작년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관련 산업의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웃 일본의 경우는 올해 안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법 제정과 과학적 예방업무를 담당할 독립성을 지닌 정부기구가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식품안전성에 관련한 철저한 예방원칙에 입각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언제 어떠한 종류의 위해가 현실화될지 모르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안전성 관련 사고의 발생은 바로 생산자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소비자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되어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재배 및 가공방법, 생산자 등의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고 표시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정착될 때 그 생산물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격에 못지 않게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품질인증, 재배방법, 브랜드 등을 포함해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표시의 충실화는 자신의 생산물을 '얼굴 있는 농산물'로서 소비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차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

으로 된다.

셋째로 생산기술의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이며 자연순환적인 농법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이란 함은 일체의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을 배제하는 유기농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저농약·저화학비료농법을 현실적인 목표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다수확에만 집착하는 종래의 생산기술이 낳은 환경 및 안전성에 대한 악영향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을 연계시킨 자원순환형의 농법의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통해 농업이 지니는 국토 및 자연환경보전, 국민건강의 유지·증진,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와 같은 다원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며 도시주민으로부터 농업생산자의 사회적 기여(외부경제 효과의 제공을 통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의 확립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는 분야이지만, 식품표시제도의 개선과 환경친화적 영농방법의 실천은 농업생산자가 도시소비자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에 속한다. 개방시대의 우리 농업을 지켜나갈 힘의 원천은 정부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확립을 통한 민간부문의 몫이라는 점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정보**